

'偶像'으로서의 近代, '手段'으로서의 近代

— 中國의 近代性 再認識을 위한 方法論的 試論

전 인 갑

(인천대 중국학과)

머리말

1840년 아편전쟁 이래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급속한 발전을 구가하고 있는 현재까지 중국의 근현대사는 충격과 변혁, 동란과 혁명, 신중국 건설을 위한 격동을 경험했으며, 지금도 강한 중국을 향한 격동적 모색은 지속되고 있다. 근현대사의 일련의 격동은 자신들의 전통을 철저히 부정하는 탐색을 포함한 지난한 모색이었으며, 그것은 '근대'를 향한, 그리고 '근대성'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집약될 수 있다. 근현대 중국인들의 위기의식이 淸朝 혹은 中華民國이라는 특정 왕조나 국가 존망의 위기감을 넘어 기존의 文化的 價値를 포함한 '中華' 瓦解를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쟁취에 대한 모색은 절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근대가 어떤 실체인지 명확히 인식하지도 못한 채, 모호하게 그려지는 근대에 대해 강박적 원죄의식에 사로잡혀 서구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정체성을 止揚하는 길만이 모던이고 근대라는 집단의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¹⁾

주 제 어: 중국근대, 국민국가, 지연망, 근대성
modern China, nation state, network of native place, modernity

그런데 체제구상으로부터 문명론에 이르기까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추구한 근대를 향한 중국인의 강한 집착이 근현대사의 전면을 화려하게 장식한 격동의 원천-動因-이었다면 그로 인한 수많은 시행착오와 희생 그리고 대극적인 다양한 근대 모색은 그러한 전환과 현실간에 형성된 팽팽한 引張力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인장력은 지향해야 할 근대와 토양으로서의 전통이 拮抗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작용하게 되었던 바, 이것은 근현대 중국에서 타자에 의해 생성된 근대성이 용이하게 정의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대성 획득이 相互排除와 相互收斂의 극히 복잡한 과정을 수반하는 동시에 양자의 팽팽한 인장력 속에서 규정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근대/근대성의 실체는 집단적으로 기획된 근대/근대성 획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었던가에 따라 ‘보편’으로 강제되는 근대/근대성과 다른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근대/근대성 이해는 중국의 사회적, 문화적 토양과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논의는 전통에 대한 재검토 즉 우리가 전통으로 인식하는 대상들이 서구적 근대 및 근대성의 내용과 대비하여 나후되

-
- 1) 최근 한국사회에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근대를 재조명하려는 움직임들이 여러 곳에서 목격된다. 동양의 정신 문화가 앞으로의 세기를 향도할 것이라는 막연한 관념적 문화결정론, 동아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변화에 자신감을 얻어 주관적 願望으로 대상을 恣意的으로 해석하는 담론, 논리적 정합성을 갖춘 듯하면서도 여전히 오리엔탈리즘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담론, 1980년대 중후반에 미국에서 한때 유행했고, 현재도 중국계 미국인 학자들을 중심 — 푸웨이밍이 대표적 — 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교 자본주의론이라는 일시적 知的 流行으로 흘러버려도 좋을 사조를 ‘상전’ 모시는 듯 하는 일련의 경향 등이 현재 중국-동아시아의 근대성과 관련된 담론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담론들이 중국-동아시아 사회의 역사적인 경험과 객관적 현실에 대한 깊이 있고 철저한 실증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80, 90년대 우리의 지성계가 그러했듯이 뿌리 없이 한 때를 풍미하는 이론적 유행에 빠질 우려도 있을 뿐 아니라 주관적 의지나 현실의 조급한 필요에 의해 대상을 건강부회할 염려도 있다.

었고, 비합리적인 것이었으며, 근현대 중국사회의 발전을 질곡하는 작용을 했던가를 면밀히 분석하는데 맞추어 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변화하는 전통과 강압되는 서구적 근대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던 중국인들의 근대 적응과 그 논리적 중국사회의 근대성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었던가를 동시에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면적 접근이 整合的으로 조합될 때 20세기 중국인들이 만들어 갔던 근대/근대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구적 근대성만이 근대성의 전부로 인식되는 편견에서 벗어나 근대성의 지역적, 문화적 다양성을 적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傳統과 近代의 重層性'이라는 관점을 통해 중국의 근대/근대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假說을 試論的으로 立論하려는 목적에서 그 동안 진행해 왔던 혹은 진행하고 있는 필자의 연구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분석의 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향후 방법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보충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음을 부언한다.

1. 국민국가 개념의 不整合性

(1) 국민국가 건설의 본질적 목표

20세기 중국인의 화두는 부강이었고, 부강을 달성하는 방법은 근대화였다. 그런데 근대화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근대화의 방법과 중국이 만들어 가야 할 근대성의 내실이 무엇인가는 각 주체들 간에 쟁론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일치한다. 중화제국 체제의 대안으로 모색된 국민국가 건설은 근대의 성취와 등치될 만큼 중국인이 탐색한 근대의 핵심적 내용이었다.

20세기 전반기에 내전으로까지 비화된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의 국가건설론의 대립은 양자 모두 근대화를 지향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근대성의 내실과 그 쟁취 방법에 대한 이견과 갈등이 초래한 결과였다. 그런데 근대화 지향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공통점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양자의 국가건설론에서 흥미 있고 매우 의미 깊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富強의 전제로

서의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을 최고의 명제로 삼는데 일치했다는 점이다. 20세기 전반기 중국공산당이 모색한 국민국가의 길 나아가 이들이 추구했던 근대성은 汪暉의 말을 빌리자면 ‘反資本主義 現代性的 現代性’의 追求였다.²⁾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국민당이 추구했던 근대성의 실체와 모색한 국민국가는 資本主義的 現代性에 ‘근접’ 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反資本主義 現代性的 現代性’의 追求를 통해서든 혹은 資本主義的 現代性의 追求를 통해서든 궁극적인 지향은 서구에서 발원한 근대적 국민국가의 건설이었고, 이것이 근대와 근대성 쟁취로 인식되었다. 중국에서 “근대는 특정 시기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도달해야 할 목표로 전화되게 되었고”, 국민국가는 목표로서의 근대가 표상된 실체였다.³⁾ 국민국가는 근대 그리고 근대성의 동의어로 인식되고, 실천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國民國家가 근현대 중국에서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개념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두 가지 과제란 부강한 중국의 재건과 보편으로서의 근대 획득이었다. ‘근대적 개인’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국가라는 세 차원의 拮抗 관계 속에서 정의될 수 있는 國民國家가 근현대 중국에서는 이것이 생성된 서구의 역사적 맥락과는 달리 부강한 중국과 보편으로서의 근대 획득의 도구로 인식되고 추구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국민국가 모색이 국가의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수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민국가가 강한 중국의 再興을 위한 도구였음을 시사한다. 정말 이래 政體論을 둘러싸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 왔고, 그 결실로서 共和를 政體로 하는 中華民國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立憲君主論, 開明君主論, 共和制論 등을 포함한 다양한 政體論이 새로운 정치 체제의 구축, 나아가 쟁취하고자 했던 국민국가의 운영 시스템이라는 차원을 넘어 국가 존립의 궁

2) 왕후이 지음,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이옥연 외 옮김, 창작과비평사, 2003. p. 48.

3) 김태승, 「중국의 ‘近代化’ 논의에 나타난 ‘他者性’의 문제 — 1930년대와 1990년대의 논쟁을 중심으로」, 『2003년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집』, 2003. p. 46 참고.

극적 정당성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의해 규정되는 국가권력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통적인 중국 국가론의 핵심은 道德國家의 具顯과 大一統 天下의 維護로 정리할 수 있다. 양자는 왕조나 국가 존립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雙翼으로 어느 한 쪽이라도 결여된다면 국가권력 존립은 치명적인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도덕의 구현과 大一統의 維護 그 자체가 국가 권력이 본질적으로 수행해야 할 지향이자 권력의 본질적 기능이기도 했다.

우선 도덕국가의 구현은 국가 좁게는 국가권력을 문화적 보편성에 이르는 수단의 하나로 보는 문화주의적 국가관념의 산물이었다. 사회유기체 혹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서구의 국가론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국가/국가권력 이해이며, 국민국가론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국가/국가권력 이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문화전통에는 도덕적 공동체와 그 집합으로서의 도덕적 국가를 지향하는 유교적 정치문화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황제나 사대부는 공동체적 의무에 따른 통치자로서 도덕적 권위를 갖고 이 집단 권위가 전체적 지배의 근원”으로 기능했다.⁴⁾ 그렇다면 황제나 사대부로 대변되는 국가/왕조의 도덕적 권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권위가 국가/국가권력의 본질적 기능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는 인간의 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성인의 가르침에 근거한 윤리적 원칙에 따라 지배 — 다시 말해 聖人の 道를 실현 — 하고, 사회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지상의 임무였다. 국가는 정치권력만이 아니라 사회의 전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도덕적 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원리에 기반하여 사회 구성원을 단결시키는 기능까지 담당해야 했다. 말하자면 국가는 문화적 보편성을 통해 사회 구성원을 통합시킬 수 있을 때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따라서 국가의 기능 역시 모든

4) 曹秉漢, 「現代 中國의 知識人과 國家·共同體·個人」, 『동아시아역사연구』 6, 1999, p. 9.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동일성을 추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통치 행위는 단순히 인민에 대한 통제와 국가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인민 동원 및 그 시스템의 운영이라는 차원을 넘어 그 자체가 도덕적 행위가 되며, 국가는 그러한 도덕적 행위에 의해 비로소 보편적 통치체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⁵⁾ 여기서 국가는 정치권력의 구현체이자 동시에 문화의 담지자로서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낸 보편성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왕조/국가 그 자체가 天下라는 등식이 성립되게 된다.⁶⁾

국가권력을 문화적 보편성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국가권력의 속성이나 政體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국가의 본질적 기능인 문화적 보편성을 구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국가의 정당성은 이미 확보되는 결과가 된다. 이 지점에서 법과 제도는 문화적 보편성 구현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며, 法治(法制)보다 문화적 보편성 즉 도덕에 준거한 德治의 우위가 가능해진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력을 발하고 있는 中體西用論은 부강과 洋務 즉 근대화를 일체화하여 추진했던 자강 운동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것은 '中華'의 문명론적 가치를 상대화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제시된 불가피한 대안적 모색이었지만 결코 중화가 내포하고 있던 문화적 보편성을 포기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中體는 전통적으로 담지해 왔던 문화적 보편성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그 위에 도구적 의미로 근대화를 접목시킨 논리가 中體西用論이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中體西用論은 근대와 전통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기저로 제시된 근대화 방법론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中體西用論은 근대 혹은 근대화라는 수단을 매개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라 할 문

5) 이렇게 됨으로써 논리적으로 국가 권력과 도덕이 대립되지 않고 오히려 일체화되게 된다.

6) 이와 같은 전통은 중국인의 중화주의적 천하관 및 유교적 국가관의 산물인바, 이에 대해서는 李成珪, 「中華思想과 民族主義」,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 지성사, 1995와 최명, 「유교적 전통과 유산」, 『현대중국의 이해』, 현암사, 1984를 참고하라.

화적 보편성을 維護하고자 했던 목적론적 담론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적 보편성의 維護는 수단으로서의 근대를 통해 달성하고자했던 부강한 중국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인식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 하에서 원론적 의미에서의 국민국가에서 탈각된 중국 특유의 국민국가론이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이것이 근현대 중국에서 모색된 國民國家 담론에서 '근대적 개인' 과 '시민사회' 가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적 보편성의 구현과 함께 국가 기능의 또 다른 핵심적인 요소는 大一統 天下의 維護였다. 大一統은 “중국과 그 주변의 공간적 통일이라는 의미 외에 정치와 사회·경제, 문화가 하나의 구조로 통합을 이루는 구조적 통일을 의미”한다.⁷⁾ 중국의 국가권력과 엘리트들은 중국이라는 文化體, 歷史體를 유지하고, 보존하며, 이를 발전시키는 것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였다. 중국의 엘리트들은 “천지를 위하여 마음(心)을 세우고, 生民을 위하여 命을 세우고, 지난 성인을 위하여 끊어진 學을 계승하고, 만세를 위하여 太平을 연다(朱熹, 『近思錄』 卷二)”는 이상을 뼈 속 깊숙이 의식하고 있었다.⁸⁾ 이것은 역사의 연속성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고, ‘中華’라는 보편적 가치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천적 행위를 소명으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명론적 영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제는 무엇이었던가? 亂世가 초래한/할 분열과 혼란 상황에서는 그러한 영속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천하의 안정이야말로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불가결한 전제였다. 그러므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帝國이 一統되는 大一統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지속시키는 것은 국가 혹은 엘리트의 본질적 사명이자 국가와 엘리트의 존재 근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大一統의 統合 — 현재적 의미로는 강력한 ‘하나

7) 曹秉漢, 앞의 글, p. 26.

8) 사대부 엘리트의 召命意識 — 憂患意識 — 의 본질과 그 學的 기반에 대해서는 李成珪, 「現代 中國 知識人の 位相」, 『지역연구』(서울대) 5권 1호, 1996. p. 119와 李成珪, 「東洋의 學問體係와 그 理念」, 『현대의 학문체계』, 민음사, 1994. pp. 21-24를 참고하라.

의 중국' — 을 달성하여 인민의 행복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국면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도덕적/현실적 의무였다. 여기서는 권력의 형태, 근대적 용어로 말하자면 政體는 그리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 어떠한 政體였던간에 大一統을 維護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다.⁹⁾

근현대 중국에서 '성공' 한 국민국가 건설 방식이었던 손문과 공산당의 국가 건설 구상은 대일통의 유희라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묘한 일치를 보여준다. 20세기 전반기에도 여전히 군벌체제와 국공 대립에 의한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의 중국을 만드는 것은 당위였다. 국민국가는 그러한 상황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새로운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그 방법은 당을 국민국가 건설의 주체로 설정했던 以黨治國이었다. 헌정에 선행하는 두 단계 — 군정과 훈정 — 는 先知先覺者와 그 집체로서의 국민당이 주도하는 국가건설 단계였으며, 공산당 역시 본질적으로 전위 정당의 속성을 내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공 양당에서 제시한 당이란 선지선각자 혹은 전위적 엘리트의 집단의지가 응결된 치국의 주체였다고 할 수 있다. 치국의 주체로서 당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대일통의 상황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기도 했다.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회의 저류로부터 강력한 리더십이 강하게 요구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중국 근현대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보수주의적 정치사상 — 예컨대 梁啓超의 開明君主論, 丁文江의 신식독재론, 毛澤東의 전면독재론 등 — 은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한 사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복되는 보수적 사조의 등장은 전통과 근대가 엮어내었던 引張力의 산물이었다고 생각된다.¹⁰⁾

여하튼 중국의 국민국가 담론과 그 실천 형태 그리고 건설을 주도한 엘리트

9) 태평천국 때의 曾國藩, 李鴻章을 비롯한 紳士層은 천하의 안정과 보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先天下安定論의 認識과 行動樣式을 보였는데, 이것은 大一統 維護의 표현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된다.

들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의 연장선에서 국민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전통적 인식의 철저한 부정이 결여된 상태에서 국민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했던 것만은 분명한 듯 하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 국민국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담지할 수 있는 부강한 중국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국가 건설 노력은 문화적 보편성의 실현 즉 도덕국가 —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념 국가 — 의 구현과 大一統 天下의 維護로 집약되는 국가의 기능을 근대적 체제라는 외피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중국적 근대 적응의 한 형태였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국민국가 건설이 지향하는 본질적 목표가 이러하다 보니 서구적 의미의 국민국가와 중국인들이 모색한 국민국가간에 개념상의 부정합성이 노정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았을까 한다.

(2) 국민국가 구성 요소의 通時性

천하 개념과 국가 개념의 괴리 역시 국민국가 개념의 부정합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유럽에서와는 다른 맥락에서 중국의 국민국가가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합리성과 서양의 고유 창조물들의 보편성(과학, 자본주의, 법, 관료주의, 종교 — 기독교, 문학, 인쇄술, 조형미술, 서양 음악 — 대위법, 화음, 교향악단 등)을 근대성의 핵심개념으로 제시하였다.¹¹⁾ 그 후 베버리안들은 논의의

10) 開明君主論 등 상기한 제 흐름은 정치적 보수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의 전체적인 개설과 각 논의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姜義華, 「二〇世紀中國思想史上的政治的保守主義」, 『歴史のなかの現代中國』, 勁草書房, 1996을 참고하라. 또한 民國初 孫文의 구상과 梁啓超의 구상, 그리고 宋教仁의 체제 구상 비교를 통해 중국 정치 문화에 뿌리깊게 着根된 정치적 보수주의의 지속성을 분석한 글로는 橫山宏章, 「中華民國の誕生と議會政黨政治の挫折」, 『中華民國史-專制と民主の相剋』, 三一書房, 1996을 참고하라.

영역을 국가와 사회로 확대하여 유럽의 국민국가(nation state) 및 유럽 역사의 산물인 국가와 사회의 관계 즉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성장 그리고 공공영역(public sphere)의 존재를 근대성의 주요 개념으로 보았으며, 그러한 정치 체제로의 전환은 유럽만의 독특한 역사 과정이었다고 설명하였다.

근대성의 핵심적 지표로 설정된 국민국가는 이처럼 시민사회 — 공공영역 — 의 존재, 국민국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기반이 되는 합리성과 주체성을 갖춘 소위 ‘근대적 개인’이라는 세 영역의 유기적 조합에 의해 태동된 역사적 산물로서 근대 이래 보편으로 인식되는 정치체제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근대 이래 보편적 정치체제로서의 국민국가는 다음 4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¹²⁾ 고정된 경계의 존재, 列國體制(interstate system), 국민적 통합,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지배하는 권력의 집중성(제한된 영역 즉 국경 안의 지역에 대한 배타적 지배)이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그 하나는 전술한 바 있듯이 근현대 중국에서는 국민국가의 본질적 구성 요소인 시민사회와 ‘근대적 개인’ 그리고 국민국가 간에 존재하는 유기성은 捨象된 채 정치체제(시스템)로서의 국민국가 건설에 편향되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정치체제적 측면에서 규정된 국민국가의 4가지 특징 중 국민적 통합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근대’적이라 할 수 없는 통시적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국민국가

11) 서구적 근대성의 중국 적용이 유럽적 편견에 의한 것으로서 근대성 개념의 중국적 재해석과 근대성 개념의 확장을 주창한 플레쥬 드 프랑스의 석좌교수 삐에르 에띠엔느 빌의 관점은 미국 중심의 중국 연구와는 또 다른 차원의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천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막스 베버가 정의한 근대성 개념은 삐에르 에띠엔느 빌, 「근대 중국과 중국학」, 『지역연구뉴스레터』 26, 1996. pp. 3-4 참고.

12) 국민국가의 4가지 특성은 백영서, 「20세기형 동아시아 문명과 국민국가를 넘어서 — 한민족 공동체의 선택」,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창작과비평사, 2000. p. 37에서 정의된 바를 따른다.

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고정된 경계와 배타적 지배영역은 적어도 전국시대 이후 중국사 전체에 걸쳐 실질적으로 존재했다. 물론 전통적으로 중국인은 國을 天下의 하위 단위로, 고정된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천하를 왕조의 지배 영역으로 인식했다. 또한 天下觀이 상대화된 근대이후에는 왕조가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전 영역을 藩部의 建省을 통해 국가의 영토 범위로 편입시킴으로써 비로소 천하의 범위와 국가의 범위가 실질적 等置性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근대 국민국가의 영토 개념에 의거하여 왕조의 영토적 경계를 주권이 배타적으로 행사되는 범위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천하(의 범위)는 중국적 가치의 보편성을 토대로 한 상상된 그리고 이념화된 경계였을 뿐이며, 중국의 각 왕조는 자신의 왕조를 포함한 列國의 배타적 지배영역(고정된 경계)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였다. 그 직접적인 증거가 곧 冊封體制이다. 冊封은 주변 국가들 — 소위 屬國 — 의 존재를 중국의 황제가 인정하는 것으로 천하의 지배자로서의 권위와 천하의 무경계성을 확인하는 이념적 행위였을 뿐이지 중국의 실효적 지배 영역을 주변 속국으로 무한히 확대하고자 하는, 따라서 중국 판도의 무경계성을 확정하려는 행위는 아니었다. 말하자면 이것은 천하질서 의식과 현실의 고정된 경계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우는 이념적 실천행위로 기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冊封體制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국민국가의 주요 특징인 列國體制와 고정된 경계는 국민국가 개념 생성 이전부터 존재했고, 천하의 주재자인 중국의 각 왕조들 역시 이를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천하의식과 표리를 이루는 大一統 관념도 영토관념과 관련해서 따져 보면 중국의 영토적 완결성 즉 배타적 지배 영역의 최대 확장과 그 통일적, 배타적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1790년대 이후 大一統의 이념과 실질이 부합되고, 영토적 완결성이 갖추어지면서 오늘날의 영토적 판도가 확정됨으로써 소위 '하나의 중국'인 大一統 중국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大一統 관념 역시 배타적이고 고정된 판도를 전제로 한 영토 관념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민국시기에 간접통치에 의존했던 번부와 동북·몽골 지역에 建省을 추진한 것은 대일

통 관념이 단순한 이념형이 아니라 언제든지 배타적 영토관념으로 전환될 수 있었음을 실례로 보여준다. 다시 말해 청말의 建省論과 新疆省을 필두로 진행된 建省 過程은 천하의 지배 영역을 국민국가의 지배영역으로 재편하는 과정으로 이해 가능하며, 천하관에 입각한 영토관념이 국민국가론에 의거한 영토관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민국가의 또 하나의 특징을 지배 영역에 대한 권력의 집중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관료제도를 통해 구현될 수밖에 없고, 막스 베버를 비롯한 베버리안들은 관료제를 근대성의 핵심적 지표로 활용하였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관료제는 그 어떤 역사체 보다 일찍 그리고 완비된 형태로 운영되었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중앙의 정교한 관료체계 뿐 아니라 중앙에서 적어도 縣 단위에 이르는 지방행정 관료체계가 제국의 각 지방을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었다. 또한 관료의 재생산 구조를 도덕적, 문화적 가치체계와 연결시켜 관료제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과거제도를 통해 학문과 관료제를 일체화시킴으로써 통치와 문화적 가치를 결합시킨 완결적인 관료제도를 유지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관료제도를 통해 지배 영역에 대한 권력의 집중성은 유효하게 발휘되었다. 물론 청 중엽 이후 관료제가 경직되면서 권력의 집중성이 얼마나 유효하게 발휘되었던가는 상당한 의문이다. 신정에서부터 전통적 관료제를 본격적으로 개편하게 되면서 관료제의 경직성을 혁파하는 한편 권력의 집중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구상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정에서 시작된 근대적 관료제로의 전환도 따지고 보면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근대적 시스템에 의해 강화하려는 '變通'을 본질로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국민통합의 특수성

국민의 창출을 전제로 하는 국민통합은 국민국가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는 국민통합의 논리가 무엇인가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원론적 의미에서의 국민통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진행된 국민통합의 복잡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국민통합의 주요한 부분인 지방통합에 작용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유교적 정통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의 정당성은 도덕성과 통일”에 있었고, 현대 중국에서도 이와 같은 “이념적(도덕적) 권위”와 “大一統 지배”는 중국 공산당의 관료체제와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 사상의 일원적 지배로 계승되고 있다고 한다.¹³⁾ 그런데 大一統의 지배는 권력에 의한 강압적 통합에 의해 실현되지만 지배 영역에 대한 그리고 인민에 대한 문화적, 도덕적 통합을 전제로 한다.

강력한 권력에 의한 大一統은 문화적 보편성의 확보에 의해 완결성을 갖출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권력은 정치적으로는 절대적 권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民을 통합해야 했고, 문화적으로는 ‘보편’적이고 ‘유일한 中華의 문화’를 통해 民을 통합해야 했다.¹⁴⁾ 중국의 국가권력이 이러한 통합을 정통성의 원천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도덕적 의무로 인식하고 행동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또한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주의적 국민통합의 기제가 갈수록 대폭 약화되는 현 시점에서 중국은 愛國主義의 高揚을 통해 국가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바, 애국주의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중국 문명과 문화에 근거한 整體성과 애착 그리고 그것에서 淵源하는 강한 자부심을 핵심적 기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 역시 ‘중화의 문화’를 기제로 한 인민 통합의 현대적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손문의 삼민주의나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 사상이 국민국가 건설 도상에서 끊임없이 畧民 혹은 人民 統攝의 기제로 원용되었다.¹⁵⁾ 국민당 정권과

13) 조병한, 앞의 글, pp. 35-36.

14) 전통적인 천하관념에 따르면 중국은 정치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화를 단순한 최고가 아닌 ‘유일한 문화’로, 정치권력은 단순한 초강대국이 아닌 지상의 모든 국가와 민족을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유일한 보편적 통합질서 그 자체라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李成珪, 「中華思想과 民族主義」, p. 108 참고). 따라서 정치와 문화를 아우르는 보편적 질서에 의해 천하가 통합되는 것은 당위였다.

공산당 정권은 동아시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국가 주도의 위로부터의 국민통합을 강제할 만한 권력을 만들어 가고 있었거나 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도덕적 정당성을 삼민주의 혹은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 사상에서 구했다. 그것은 강력한 권력과 함께 문화적, 도덕적 차원에서 통합을 통해 완결될 수 있었던 전통시대의 大一統의 통합 경험과 묘한 일치를 보여준다. 결국 근현대 중국에서의 국민통합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에 대한 문화적 통합을 지향했던 전통적인 통합 논리의 연장선에서 國共 兩黨이 제시한 국민통합의 논리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문제인 국민통합의 복잡성은 전통과 근대가 중층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의 반영이다. 중국 사회는 오랜 동안 고도의 안정을 구가했다. 그런데 고도의 안정성을 가능케 했던 요인들은 근대 사회로 전환되면서 정체의 표상 때로는 부패와 퇴락의 원천, 위기의 진원으로 지목되었다. 그리하여 그러한 요인들은 전통이라는 미명으로 부정하고 해체하거나 극복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전통,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 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지연망, 출신 지별로 형성된 이질적인 문화와 그 정체성은 비록 고질적인 분열을 조장하여 국민통합을 가로막기는 했으나 20세기 중국사회에서 각종 사회적 자원을 유통시키면서 이 사회 나름의 안정성을 유지하게 했다. 그러므로 국민통합은 그러한 요인들을 전면적으로 극복하면서 진행되리라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으며, 원론적 의미의 국민통합과는 구별되는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낙후하고, 발전의 장애로 비칠지언정 삶의 일부로 구조화된 전통을 내포하면서 국민통합이 진행되어야 했던 것이다. 비록 수많은 시행착

-
- 15) 국민국가를 건설했다고 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중국의 공식 문건이나 식자들의 글 속에서 국민이라는 용어가 그리 상용되지 않음에 비해 인민 혹은 公民이라는 용어가 상용되며, 민국 시기에도 국민보다는 전민 혹은 인민이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였다. 물론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손문의 이론에 근거하다 보니 그러한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이라는 개념의 非常用化는 어쩌면 극히 지엽적 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으나 매우 흥미 있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오와 곤란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길을 배제한 국민통합의 길은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농후했기 때문이다.

강한 동향관념과 판시 중시,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심각한 이질화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계층적 분열이 국민통합의 심각한 장애물이었다. 그러한 네트워크와 문화는 오랜 동안 사회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유통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근대 이후에는 분열의 토양이 되어버렸다. 분열의 원천으로 지목된 전통 특히 지연 중심의 생존방식이 극복되어야만 국민통합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었으나 그 가능성은 전통의 무게만큼이나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게다가 지연망으로 대표되는 전통이 부정적으로만 기능했다면 오히려 국민통합은 비교적 손쉽게 진행될 수 있었겠지만 순기능도 엄연히 존재했다. 또한 20세기 중국에서 지연망은 여전히 주요한 사회적 자원이었다. 문화적 이질감이나 격렬한 시장 경쟁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생존의 안정성, 문화적, 심리적, 경제적 안정성을 부여했으며, 심지어는 사회계층의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현상은 지연망이 중국인의 생존방식의 하나였음을 의미한다. 국민통합은 이러한 현실과 유리된 채 진행될 수 없었다. 이 점에서 국민통합이 극히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국민통합이라는 근대는 전통과의 접목이 불가피했다.

셋째, 국가 영역 내에 존재하는 지역 — 지방 — 의 통합 역시 국민통합의 주요한 측면이다. 중앙에 의한 지방 통합이 동아시아 각 국에서 진행되었던 국민통합의 일반적 과정이었다. 그런데 중앙에 의한 지방의 통합 과정의 해명은 예상 이상으로 훨씬 복잡하며, 섬세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최근 사회과학계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중국사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였다. 大一統의 중국에서 지방의 통합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긴장관계는 '중국'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소였다. 郡縣論과 封建論은 중앙집권의 논리와 중앙집권에 대한 견제-분권의 논리로 일찍이 漢代 鹽鐵論에서부터 논란이 되었다. 또한 민국 시기만 하더라도 湘人湘治, 粵人粵治 등의 구호가 드높이 주장되었으며, 湖南省의 경우에는 省憲法을 제정하기도 했다. 지방 단위를 넘어 전국적 규모에서의 분권적 국가 구상인 聯省

自治도 집권적 체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의 사회사 연구 성과에 의하면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는 지역에 따라 극히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되었으며, 모순되게 보이기 조차하는 다양한 양상과 특정 시점에 한정하여 정태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복잡한 동태성을 띠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공적인 권력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의 문제도 있지만 비공적인 지방권력과 중앙권력 — 국가 — 의 관계, 비공적 지방권력간의 관계도 복잡한 양상으로 존재한다. 비공적인 지방권력이란 哥老會, 紅槍會, 天地會, 青幫, 紅幫 등 지역사회에서 강력한 비공식적인 권력을 가졌던 會黨과 각종 종교 비밀결사 그리고 宗族集團 등을 지칭한다. 이것을 두고 국가와 사회의 관계라고 할 지 모르나 비공적인 지방 권력은 공적인 지방 권력과 때로는 필적할 만한 세력으로, 때로는 상당한 잠재적 위협으로 잠복하면서 명확히 지방 권력의 주요한 구성요소로 존재했다. 이 점에서 비공적인 지방권력의 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라는 차원과 중앙과 지방의 문제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었다.

바로 이 점에서 지방의 통합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비공적인 지방권력은 세력의 크기나 권력행사의 양상이 극히 다양하며, 지역적으로도 심한 편차를 보인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긴장 나아가 지방통합은 그 만큼 복잡하고 다양해 질 수밖에 없으며, 중앙의 지방에 대한 포섭과 수용 그리고 배제도 지역에 따라, 중앙 권력 혹은 공적 지방권력의 강약에 따라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지방권력과 지방권력간의 역학 등 여러 가지 因所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2. ‘傳統’의 力動性

(1) ‘근대’의 중국적 模式 탐색

근대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내포하는 보편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중국에서 탐색된 근대의 중국적 典型性을 이해하려는 방법론적 시도의 일환으로 본고의 논의가 진행됨을 먼저 밝힌다.

개혁개방 이후 전통의 부활이 학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개혁개방이 질적 전환을 하게 된 90년대 이후 사회주의적 인민 보호/통제 시스템이 심각히 동요 혹은 해체되는 현상과 함께 전통의 부활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인민공사와 단위 체제의 해체, 내외부적으로 강요되는 국유기업 중심 경제체제의 구조 조정 등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초래한 급속한 사회변동의 결과 그 동안 국가가 제공하던 각종 사회적 보호기제들이 급속히 해체되었다. 게다가 民工潮로 대표되는 중국 사회의 엄청난 인구 유동 그리고 시장 경제의 진척과 비례하여 심화되는 생존 경쟁은 都農을 막론하고 생활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폭시켰다. 民工潮와 자본주의적 경쟁의 주무대인 도시에서는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

전통적인 사회제도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부활하여 그 존재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정이며, 이는 사회주의를 통한 근대적 국민국가 및 근대성의 추구 노력과 배치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적어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래 가족주의, 종족조직, 종교와 민간 신앙, 地緣組織 및 黑社會를 비롯한 각종 임의단체 등 뿌리깊게 장기지속된 전통은 봉건주의의 잔재 그리고 근대적 사회질서 구축의 장애물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념과 과학의 담론에 의하여 전면 부정'¹⁶⁾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紅的 흐름의 퇴조와 함께 사회 전 영역에서 부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전통적 생활 문화의 영역이 사회경제적 자원으로 재생산되고 있다'고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¹⁷⁾

도시의 경우 특히 地緣 중심의 關係網이 국가의 인민 보호 시스템의 약화에 따라 민간의 자위 기제로 자연스럽게 부활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인류학, 정치학, 사회학적 연구가 최근 유행처럼 진행되고 있다.¹⁸⁾ 이것은 지연망

16) 김광억, 「중국연구를 위한 방법론: 공식영역과 비공식영역의 관계」, 『아시아 태평양지역연구』 제2권 제2호, 2000. p. 137.

17) 위의 글, p. 136.

18) 미국의 중국학계를 필두로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활

이 현재의 도시 사회가 운영되는 핵심적 하부 시스템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지연은 혈연과 함께 근대 사회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따라서 극복되어야 했던 대표적인 舊惡이었다. 지연망의 부활은 그간 억압되었던 전통의 재등장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전통적 네트워크이 근대성의 확충에 역동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중국적 토양이며, 중국적 토양을 배제한 채 서구적 지표 혹은 사회주의적 지표에 준거하여 모색되었던 근대성은 이상일 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지연망을 전통의 대표적인 사례로 삼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보고자 한다. 지속되는 전통은 근대성 획득에 있어 배제할 수 없는 자원이자 토대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현실에서 형성되고 있는 근대성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구조는 전통과 근대가 중층적으로 결합되는 형태였다. 그리고 중국의 근대성은 전통과 근대가 만들어 낸 팽팽한 긴장력의 산물일 수밖에 없었다.

지연망이 도시 사회의 제반 사회적 자원을 유통시키는 기능을 담당한 것은 최근의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 적어도 明清時代 이래 지속된 현상이었다. 모든 영역에서 근대적 질서와 가치체계를 혁신적이고 역동적으로 만들어갔던 20세기 전반기 만 하더라도 지연망은 근대적 질서를 구축하는데 역동성을 갖고 개입하였다.

지연은 전근대적인 인적 결합원리로써 근대적 발전에 따라 지양되어야 할 부분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자세히 추적해 보면 근대의 精華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 발전할수록 지연망의 사회적 기능이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上海의 경우 도시 발전의 초기에 해당하는 淸嘉慶年間부터 지연망이 사회화된 동향단체는 동향인의 단순한 친목 모임 차원을 넘어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同鄉會의 行會組織 즉 公所로 그 성격이

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 국내의 연구로는 정종호, 「중국의 '유동인구'와 국가-사회 관계 변화: 북경 '浙江村'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6-2, 2000 등이 있다.

변화하였다. 지연망이 단순한 인적 네트워크에서 경제 활동의 사회적 자원으로 기능을 확대했던 것이다.¹⁹⁾

그러한 기능은 淸末, 民國 시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동향동업단체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고, 그 규모도 확대되었다. 이는 지연망이 급속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연망과 동향·동업단체는 이미 상해라는 근대적 국제 도시의 구성원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시스템의 하나로 고착되기에 이른다. 사실 지연망은 도시 사회 적응에 있어 생활의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던 사람들이 비교적 용이하고 문화적, 경제적 충격과 곤란을 최소화하면서 도시 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고, 타 지역으로부터 끊임없이 유입되는 이주민을 흡수하는 주요한 사회적 메카니즘으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지연망이라는 전통을 통해 근대적인 도시사회에서 생존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20세기 전반 중국의 도시민들이 근대에 적응했음을 의미한다.

실제 중국에서 근대의 상징이자 전 중국이 성취해야 할 모델이었던 상해에서 지연망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발휘하면서 근대성을 획득하는데 역동적으로 개입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국내외의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근대적 조직으로 새로이 등장한 각종 法團 특히 同業公會, 商會는 그 근대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내부구조는 舊來의 公所的 傳統을 흡수하여 구축되는 등 지연망에 크게 의존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활동에서 매우 전형적으로 나타나지만 혁명을 지향하는 학생운동 조직 역시 지연망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²⁰⁾ 또한 지연망은 근대 사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에도 깊숙이 작용하여 오히려 자본의 축적과 경쟁을

19) 지연망의 작동 실태에 대한 본고의 내용은 拙著, 『20세기 전반기 상해 사회의 지역주의와 노동자 — 전통과 근대의 중층적 이행』,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의 제1편 「상해사회와 지연망」 중의 주요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20) 정문상의 일련의 연구는 그러한 사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내는데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글로는 鄭文祥, 『1920년대 전반기 上海地域 學生運動의 전개와 同鄉會』, 『中國現代史研究』 5, 1998을 참고.

촉진하는 등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용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연망은 사회계층 형성에도 개입함으로써 근대적 사회 질서가 구축되는데 적지 않은 작용을 하였다. 예컨대 20세기 전반기 上海 社會에서는 寧波人, 廣東人, 蘇南人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 반면 蘇北人, 安徽人 등은 상대적으로 하층민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연망이 사회, 경제 생활 뿐 아니라 사회계층 형성에도 중요한 변수의 하나로 작용했음을 말해 준다.

계층적으로 보아 자본가, 지식인 등 상층에 비해 하층에 해당하는 노동자 사회에서 지연망의 작용이 훨씬 현저했다. 노동자 사회에서 지연망은 幫口, 互助會, 關帝會, 兄弟會 등의 명칭으로 조직화되었는데, 某某幫이라는 명칭의 幫口가 대표적이었다.

노동시장과 생산현장도 지연망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지연망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접근하는 가장 일반적인 매개였으며, 幫口는 노동시장에 편입된 노동력을 관리하는 비공식적인 시스템으로 기능했다. 그 결과 특정 업종의 노동시장이 특정 몇몇 방구에 의해 獨·寡占되거나 방구간 충돌이 격심해 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연망이 동일 지역 출신자들에게 생존의 안정성을 부여하고 자본주의적 경제 시스템에 적응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실조차 부정할 수 없다. 20세기 전반기 중국의 고용관행과 노무관리제도 등 생산현장을 작동시켰던 각종 시스템 역시 지연망을 정점으로 운영되었다. 포공제와 공두제가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방구를 생산현장의 노무관리제도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하면서 지연망을 생산현장으로까지 긴밀히 연결시켰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노동자는 물론이고 근대적 생산체제를 갖춘 기업도 지연망에 의해 유지, 운영, 재충원되는 노동시장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1930년대에 들어 남경국민정부는 근대적 국가 운영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 각 부문의 제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²¹⁾ 노동문제의 제도화도

21) 1930년대 국민정부하에서 진행된 제도화 실태와 그 성격은 拙稿, 「1930年代 上海 노동자 사회와 同鄉·同業網 - 上海 國民黨政權의 勞動政策과 관련하

추진되어 「工廠法」, 「工會法」, 「團體協約法」, 「工廠檢查法」, 「勞動契約法」 등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과 생산현장의 제도적 환경의 변화는 불가피했다. 그러나 근대적 국가 운영시스템을 지향한 국민당 정권의 정책의지의 혼선, 집행의 난맥상, 지나친 黨化 指向, 제도의 맹점, 제도와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런데 자본주의 선진국을 모델로 궁극적으로 근대적 노동시장으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생산현장에 근대적인 운영 시스템을 정착시키려 했던 근대적 지향을 가로막은 가장 주요한 요인은 노동자 사회에 삼투해 있던 뿌리깊은 전통이었다. 예컨대 제도화가 강력하게 진행됨으로써 초래된 고용의 불안과 생존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면 될수록 關帝會, 幫口를 중심으로 작동되는 지연망이 자위적 수단으로 오히려 활성화되었다. 이것은 제도화로 초래된 불안정성 다시 말해 강요되는 근대에 저항/적응하는 수단으로 전통적인 네트워크와 관성적으로 해 왔던 자위 방식이 이용되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노동자 사회의 근대는 강요되는 제도화와 그에 대한 저항과 적응 양식으로서의 지연망이 팽팽한 줄다리를 통해 만들어 낸 사회적 공간이었던 것이다.

본 절의 冒頭에서 언급한 현재의 상황과 20세기 전반기의 상황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첫째, 지연망이 사회 변화의 역동성에 저항/적응하는 기제로 기능했다. 20세기 전반기 상해에서 진행되었던 급속한 근대적 변화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원리가 확산된 결과이다. 지연망으로 구체화된 전통은 자본주의적 시장원리라는 근대/근대성이 초래한 역동적 사회 변화에 직면하여 당해 시대

여」, 『東洋史學研究』 72, 2000와 「生産過程의 制度化와 勞動界의 對應 — 1930년대 上海 勞動界를 사례로」, 『歷史學報』 176, 2002에서 분석한 바 있다. 두 글은 제도화로 상징되는 근대적 지향과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사회간에 형성된 긴장관계를 통해 전통의 관성이 근대 구성의 한 요소로 개입되고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 연구이다. 참고로 1930년대 국민당 정권의 노동정책을 분석한 李丙仁(「國民政府의 勞動政策과 上海 勞動界」, 『東洋史學研究』 75, 2001)의 연구 역시 유용한 시사를 준다.

의 상황에 조용하여 끊임없이 '재구성' 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의 유사성은 중국 근대/근대성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회 영역에서 근대/근대성 개념의 재검토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제기한다는 것이다. 막스 베버를 비롯한 많은 베버리안들이 제시한 근대성의 '理想典型'의 각종 지표를 기계적으로 중국 사회에 적용하게 된다면 중국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근대성을 갖춘 사회로 평가할 수 없게 된다. 뿐 만 아니라 근대/근대성은 市場 혹은 시장경제를 토대로 형성되고, 유지된다고 할 때, 지연망이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기제로서 그리고 시장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기제로 기능하고 있는 상황을 도외시한 채 그 부정적 기능만을 정태적으로 파악한다면 '理想典型'으로서의 근대/근대성과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근대/근대성간의 괴리를 해석하기 몹시 어렵게 된다.

(2) '사회자본' 으로서의 지연망²²⁾

최근 현대 자본주의를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문화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의 흐름이 '사회자본론(social capital)'이다. 사회자본론은 모든 경제행위는 사회적 맥락을 떠나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경제행위에 있어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는 논의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이미 많이 제기되었다. 사회적 관계는 경제행위에 대한 왜곡이나 잡음이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므로 동일한 하나의 경제행위가 특정 사회에서는 합리적이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비합리적일 수 있으며, 나아가 市場이란 경제적 영역이며 제도임과 동시에 정치적 영역이며 문화적 영역이고, 그 자체가 사회, 역사적 산물이라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²³⁾

22) 이하의 서술은 2004년 상반기 중에 발표할 필자의 논문 「中國 近代企業의 지배구조와 合夥 慣行 — 地緣網의 '사회자본' 화」의 내용 중 관련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23) 사회자본 논의에 대해서는 박순성 외, 「사회적 자본과 신뢰 위기」, 『21세기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방안 연구 — 행위자 유형별 전략을 중심으로』, 1999년도 협동연구지원사업 특별정책과제, 2001. 5와 Putnam,

사회자본론은 사회적 관계를 경제 행위의 중요한 한 요소로 파악함과 아울러 사회적 관계에 자본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物的, 人的 자본과 비교함으로써 경제 행위를 보다 폭넓게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와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 작동에 있어 각종 한계를 노정한 '市場'을 보완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 즉 사회자본을 매개로 운영되는 '共同體'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회자본의 정의는 아직 그리 명확하지 않은 듯 하나 이를 최초로 본격 제기한 콜만에 의하면 사회자본은 물적, 인적 자본과 달리 행위자들 간에 내재하는 관계의 구조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한 개인에게는 없지만 그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²⁴⁾ 간단히 말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윤리적 기준, 관행, 동의(consensus), 그리고 비계약적 신뢰, 규칙, 조직, 권위의 위계 관계 등이 사회자본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자본은 다른 자본들과는 달리 개인이나 물리적 생산시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내에 존재하면서 경제활동과 경제조직의 물적인 기초를 이룬다.²⁵⁾

Robert,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안청시 외 역,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2000)을 비롯하여 Fligstein, Neil, "Markets as Politics: A Political-Cultural Approach to Market Institu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 (August), 1996; DiMaggio, Paul and Hugh Louch, "Socially Embedded Consumer Transactions: For What Kinds Of Purchases Do People Most Often Use Network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1998; Lie, John, "The Concept of Mode of Ex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 1992 등을 참고.

24) Coleman, James,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Partha Dasgupta and Ismail Serageldin 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C., World Bank, 1999. p. 190. p. 16, p. 19 참고.

25) 사회자본의 기능은 크게 정보(information), 통제(control), 결속감(solidarity)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받고, 유리한 사회적 관계 내에 위치할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므로 사회자본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에서 중국의 淸시 — 특히 지연망 — 가 사회자본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자본을 중국연구에 적용한 사례는 화교자본에 대한 연구에서 전형적으로 원용되고 있는데, 중국 近現代史 연구에서도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²⁶⁾ 자체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²⁷⁾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축적

에 비해서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다. 둘째, 개인이 포함된 사회적 연결망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서 그 개인은 주위의 사람들을 작은 노력으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자본을 가진 사람들간에 가치관, 규범, 목적의 공유를 통해서 결속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통합 효과는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합행동을 할 수 있게 한다(박순성 외, 「사회적 자본과 신뢰 위기」과 Sandefur, Rebecca and Edward Laumann, "A Paradigm for Social Capital," *Rationality and Society* 10, 1998 참고).

26) 예컨대 同鄉 네트워크, 親族主義, 同鄉·同業團體의 중요성, 경제활동에서의 '신뢰'와 신용의 중요성, 商規範과 商道義의 강한 규제력 등.

27) 최근 몇 년간 이 부분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전술한 필자의 줄고를 비롯하여 李丙仁, 「1920年代 上海의 同鄉關係와 社會團體」, 『歷史學報』 164, 1999를 비롯한 일련의 연구와 鄭文祥, 「1920年代 前半期 上海地域 學生運動의 展開과 同鄉會」, 『中國現代史研究』 5, 1998을 비롯한 일련의 연구, 金承郁, 「北京政府時期 上海의 近代銀行과 銀行公會」, 서울 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1 등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노동자, 상인, 학생, 일반 시민 등 상해 사회의 각 계층이 공유하고 있는 동향관계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상공업 활동에서의 동향관계 작용 문제에 대한 국외의 주요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베르제르는 기업의 창업과 유지에 있어 동향관계의 중요성에 착목하여 기업의 경영구조가 동향관계와 가족주의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Bergere, Marie-Claire, *The Golden Age of the Chinese bourgeoisie, 1911-1937*, Cambridge Univ. Press, 1990의 II 4(The social structures of the new bourgeoisie). 또한 徐鼎新, 錢小明을 비롯하여 馬敏, 朱英 등도 중국의 전통적인 사회조직과 네트워크 등이 商會 조직 뿐 아니라 제반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검토하였으며, 上海總商會, 上海各馬路商界聯合

된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된 지연망의 기능을 사회자본론이라는 틀로 재해석하여 지연망이 지속성을 갖고 유지되고, 近現代史上 일정한 효용성을 발휘했던 원인을 해명할 수 있다면 미시적 차원에서 전통과 근대의 관계 나아가 중국의 근대/근대성을 再規定할 수 있는 논거가 마련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연망은 오랜 기간 동안의 검증 과정을 거친 '신뢰'의 네트워크이다. 20세기 전반기까지 중국 사회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러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연망이 단순한 인적 네트워크 혹은 중국 특유의 문화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대 기업의 물적 토대로 작용했다. 19세기 후반이래 근대적 기업제도와 경영 방법이 서서히 정착되어 갔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였다. 그 과정에서 신뢰를 최대의 기반으로 했던 전통적 합과 관행이 근대 기업의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合夥慣行을 매개로 지연망이 인적 네트워크의 차원을 넘어 자본으로 기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²⁸⁾

중국의 근대 기업이 설립, 발전하는 과정을 분석해 보면 기업 경영에 직접 투하되는 물적, 인적 자본 외에도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크게 작용했다. 그 중에서 특히 지연망이 근대 기업의 경영구조 전체에 상당히 복잡한 양

會 혹은 同業公會 등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원의 네트워크 — 그 중에서 동향네트워크가 가장 핵심적 — 을 분석하여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을 분석한 바 있다(陶水木, 『浙江商幫與上海經濟近代化研究』, 上海三聯書店, 2000; 徐鼎新, 錢小明, 『上海總商會史』,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1; 朱英, 『辛亥革命時期新式商人社團研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1; 虞和平, 『商會與中國早期現代化』, 上海人民出版社, 1993; 馬敏, 朱英, 『傳統與近代的二重變奏』, 巴蜀書社, 1993; 張桓忠, 『上海總商會研究』, 臺北, 知書房出版社, 1996; 邱澎生, 『商人團體與社會變遷』, 臺灣大學歷史學研究所 博士學位論文, 1995).

28) 그런데 地緣網과 合夥慣行이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과 그것이 기업 활동의 효율성 및 기업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했던가는 밀접히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나 분석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차원의 분석 대상이다.

상으로 영향을 미쳤다. 鄉誼를 기초로 이루어진 동향 상인 및 기업가들의 유기적인 의존관계와 협조는 기업의 설립은 물론이고, 그 발전에도 기여했다. 또한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지연망은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영자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하는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물질,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풀(pool)로 기능했으며, 동향인 기업 간에 실질적 연합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한 측면도 있다. 뿐 만 아니라 鄉誼에 기초한 신뢰의 네트워크 자체가 보다 직접적으로 자본으로 전환되어 경영 위기 극복의 실질적 재원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근대 기업의 기업 활동은 지연망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토양에서 전개되었다. 그러한 토양에서 형성되고 그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던 전통적인 기업 형식이 합과 기업이었다. 合夥의 성격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비교적 규모를 갖춘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위탁형 기업 경영이 일반적이고, 股東 — 투자자 — 구성의 폐쇄성, 경영층 선임의 엄격성이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무한 책임, 소유와 경영의 분리, 투자 자금의 투기적 성격, 이익 분배(官利와 紅利 分配) 방식 — 특히 경영층(夥計 포함)에 대한 수익(紅利) 분배권(收益股權) 보장 — 등 合夥 기업의 구조적인 성격으로부터 기인했다. 그러므로 동업자인 股東을 구성하는데도 그리고 전적으로 경영을 위탁해야 하는 경영자를 물색하는데도 다방면에 걸친 공식, 비공식적 검증을 통해 확인된 신뢰를 필요로 했다. 생활 속에서 淸시를 중시하는 문화에다 合夥人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중시되는 합과 기업의 구조상, 평소에 밀접한 교류를 갖고 있거나 신뢰할 만한 보증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으로 합과 기업의 지배구조가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리고 동업 투자자(股東)와 경영인(및 그 보증인)에게 부과되는 무한 책임이라는 ‘안전 장치’가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연망이라는 신뢰 관계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 자본으로서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지연망이라는 자본을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과 결합시킬 수 있는 기제가 현실적으로 필요했으므로 그러한 사회적 자본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합과 기

업의 자원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도 불가피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전통적인 기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근대기업이 등장하였다. 주식회사(股分有限公司)를 비롯한 각종 공사들이 관련 법률에 의해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는데, 이것은 근대적 기업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대적인 기업 시스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法人化된 새로운 형식의 근대기업에서 합과 경영의 성격이 전통적인 양상으로 혹은 근대적인 변모를 거쳐 온존되고 있었다. 그 원인은 기업 자금 조성과 지배구조상의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기업의 자본 조성 방식은 전통적인 자본 조달 메카니즘과 현대적인 자본 조달 메카니즘이 혼재된 과도적 양상을 보였다. 외형상 금융기관, 주식 모집 등을 통한 근대적인 자금 조달 방식이 이용되었으나 그 내실은 합과 기업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지연 의존, 附股 投資 등 전통적 투자 방식과 관행이 근대적 자금 조달 방식의 외피를 쓰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한 투자에 대한 관념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근대기업에 대한 투자를 경영권과는 무관하게 안정적 인 고수익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전통적 투자 관행의 연장선에서 이해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근대 기업의 자금 조달은 전통적인 자금 조달 방법과 근대적 자금 조달 방법이 중층적으로 공존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자본 구성의 성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자금 조달 방식은 근대 기업의 지배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근대기업 중 가장 발전된 형태라 할 수 있는 股分(無限)公司와 股分有限公司의 사례를 통해 합과 관행과 근대기업 지배구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지연망이라는 사회자본이 합과 관행을 매개로 지배구조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股分(無限)公司는 合夥가 법률 규정의 해 명칭을 달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양자의 지배구조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이었다.

지연망이 합과 관행을 매개로 지배구조 형성에 미친 영향 다시 말해 합과 관행과 지배구조간의 상관관계는 고분(무한)공사 보다 고분유한공사에서 훨

싯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최고 경영자는 소유 지분의 多少 보다는 경영 능력과 지연망이라는 자본의 다과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정 개인이 축적한 사회적 신뢰와 지연 기반이 경영자 선임의 중요 잣대였다. 또한 기업 경영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를 소지한 채권자 및 투자자 그리고 경영자의 관계도 지연망을 신뢰의 기제로 삼아 형성되었다. 당시의 기업 환경에서 이러한 신뢰의 기제는 최고경영자 선임이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董事를 비롯한 경영층 전체의 선임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 그 결과 고분유한공사의 지배구조가 지연망을 중심으로 짜여지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연망은 합과 관행을 매개로 기업 지배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합과는 검증된 신뢰를 자본으로 하여 유지되는 기업형식이었고, 지연망 — 그리고 친인척 — 이 그러한 신뢰를 창출하는 사회적 토양이었다. 지연망이 신뢰를 제공하고, 신뢰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구조는 근대기업 특히 고분유한공사의 경우에도 지속됨으로써 근대기업의 지배구조에서도 지연이 핵심적인 작용을 지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연망이 사회자본으로 기능하는 구체적인 양상이었다.

그런데 지연망의 효용이 사회 전반에 착근된 상황에서 개별 기업의 발전 혹은 국가적인 경제 발전을 어떻게 추구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지연망이 발전에 장애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한다는 논리는 중국 근대 기업 발전 과정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우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혈연과 지연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가 일정한 발전 단계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면 발전을 桎梏하게 되며, 이 점에서 혈연, 地緣 중심의 기업 구조는 비효율적이라는 현재의 평가는 정당하다. 그럼에도 기업 발전 단계와 중국 고유의 네트워크, 가치체계, 투자 관행 등 문화적, 사회적 토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지고 있던 중국 근대기업의 內實 그 자체는 동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무시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균질적으로 모든 지역에 강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화교 자본이나 印度係 자본에서처럼 고유의 네트워크와 정체성이 발전의 動因으로 작용하는 ‘차이’를 고려한다면 그러한 ‘차

이'가 발생하게 된 연원을 해명한다는 차원에서도 지연망이 사회자본으로 기능하여 만들어 낸 중국 근대기업의 내실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은 결코 부정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또한 사회자본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거래 비용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자본의 폐쇄성으로 인해 사회 전체의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게 됨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타당성이 있다.²⁹⁾ 사회자본은 일정한 범위에서 배타성을 띠기 때문에 사회자본 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 과다와 그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특정 발전 단계에서 사회자본이 그렇게 작용했던가를 실증적으로 논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사회 전체의 성장력을 견인함으로써 사회자본의 배타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상쇄시킨 측면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앞서 소개한 비판이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19세기 중반 이후 국가건설과 근대적 사회질서 확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었던 중국은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근대적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했다.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각종 근대적 제도들이 시행되었으며, 시스템에 의해 국가와 사회를 운영하려는 노력은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근대적 시스템의 도입과 그것을 수용하는 토양간에 괴리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과정의 복잡성을 이해해야만 근현대 중국인들이 만들어갔

29) Jun Jin, "Transaction Cost and Overcapitalization: A Negative Social Capital Theory", 清華大學 國際會議發表文, 2000, 6(李民子, 「中國의 中國研究: 사회학 분야의 현황을 중심으로」, 『中蘇研究』 91, 2001, pp. 98-99에서 재인용).

던 근대의 내실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자신들의 생활 깊숙이 내화되어 있던 의식과 관행 그리고 문화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근현대 중국인들이었다. 비록 전통으로부터 발원하는 그들의 의식과 관행, 문화가 때로는 근대적 사회 시스템 도입에 장애가 되거나 전면적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했을 지라도 그것은 근대적 시스템이 뿌리내려야 했던 토양이었으며,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자원이었다. 근현대 중국인들이 만들어갔던 근대적 시스템의 복잡성과 역동성은 바로 여기서 기인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다음 몇 가지 문제를 보다 면밀히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첫째, 전통과 근대의 문제는 발전론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닐 뿐 아니라 역사(혹은 전통)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통과 근대가 격렬한 마찰음을 내고 있던 시점을 과도기로 보는 인식은 극복의 대상으로서의 전통과 추구의 대상으로서의 근대를 전제로 중국의 근대/근대성을 이해함으로써 중국인들이 형성해 가고 있었던 근대/근대성의 실체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 반면 변화하지 않는 전통을 강조하는 환원주의적 관점 역시 전통의 다이내믹스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근대의 중국 사회를 움직이는 제반 기제와 사회적 자원의 유통 구조를 전통과 근대가 각각 발휘했던 역동성에 주목해서 파악해야 한다. 전통과 근대가 중층적으로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진행되었던 근대/근대성의 탐색과 그 실천의 성과와 한계가 규명될 때 비로소 중국에서의 근대 혹은 근대성의 실체가 보다 명확해 질 것이다.

둘째, 시민사회론이 중국 근현대사 인식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중국적 시민사회' 혹은 '제3의 길' 과 같은 모호한 개념의 도출이 불가피한 이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지연망을 비롯한 각종 인적 네트워크, 경제 행위에서의 신용, 商慣行 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시민사회 확인에 주안점이 두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비록 서구적 시민사회는 아니더라도 소위 중국적 시민사회의 토양이 존재하며, 따라서 중국에도 시민사회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의 가설적 탐색을 통해 현실에서 작동되고 있는 전통의 사회, 경제적 기능에 천착했다. 그 결과 지연망, 도덕적 규범, 각종 관행 등 전통적 사회 관계와 문화적 토양은 근현대 중국인에게 가장 친화력이 있는 따라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원용할 수 있는 기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전통적 사회 관계나 문화적 토양은 시민사회의 구성 요인으로 작용했다기보다 실질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리하여 근대가 초래한 가능성과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기제로 작용했던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재구성' 되는 전통의 역동적 면모이며, 보편으로서의 근대를 통해 중국을 이해하는 관점의 부적 절함을 말해 준다. 논의를 좀더 진척시키자면 본질적으로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상이한 역사적 경험과 토양을 가진 역사체에 동질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위와 같은 현상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술했듯이 화교 자본 등이 갖고 있는 고유의 네트워크와 가치체계, 정체성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일익을 확고히 담당하고 있다. 명백히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이며, 오랜 기간동안 검증되면서 확인된 전통의 역동성이 만들어 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국민국가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볼 때 중국이 탐색하고 실천에 옮겼던 근대/근대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정치적, 문화적 보편성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천하 관념과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 전환 없이 모색된 중국의 국민국가는 유럽의 그것과 다른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본주의적 근대성 그리고 자본주의적 국민국가를 추구한 중국국민당이든 반자본주의적 근대성 그리고 사회주의적 국민국가를 성공시킨 중국공산당이든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을 근원적으로 대체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를 문화적 보편성을 담지하고 이를 구현하는 주체로서, 그리고 천하의 안정을 담보할 大一統의 主體로 보았던 전통적인 인식에서 국공 양당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유로웠는지는 의문스럽다. 이러한 상황에

서 이들에 의해 주도되어 만들어진 국민국가는 근대적 개인,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국가라는 세 차원의 길항 관계 속에서 운영되는 서구의 국민국가와는 다른 차원의 국민국가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차원이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의미한다. 중국의 국민국가 건설 과정은 문화적 보편성의 실현과 大一統 天下의 維護로 집약되는 국가의 기능을 근대적 체제인 국민국가라는 외피를 통해 달성하려는 과정이었으며, 국민국가는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이 글은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ABSTRACT

㉚④ㄱ “갑뭉”, 20ㄱ “비←”
- 먼똥ㄴ겔㉚④(타)❖ 총궤뵤(助)쌍

II Σ

186020ㄴㄹ8㉚ㄴ겔 臨7 뵤갓へ ㉚④툽↑㉚へ 겔 ㉚④
だ KVㄱ 쌍 ❖ 뵤 ④똥ㄴㄴ2ㄴ겔ㄴ답뵤뵤의측 s.뵤→❖뵤
㉚④8ㄱ ❖ㄱㄹ㉚④툽↑㉚ㄴ 겔 N.다 ㄱ ㄴ 10³ 711㉚ㄴ전
㉚ㄴV)㉚ ㄱㄱㄴ겔뵤→㉚④툽↑ㄱ 뵤ㄴ뵤❖뵤뵤 뵤 뵤뵤
ㄴ㉚④툽↑뵤→ ㄱ 착(타) 뵤K0 총7㉚ Mㄱ❖뵤N. ㄱ 착(타)
>ㄴV) 뵤ㄴㄴ겔㉚④ㄱ뵤뵤 뵤 ㉚④ㄱ4툽ㄱㄴ겔9 ㉚② NA
ㄴ 뵤U.ㄱ뵤뵤 총 궤 8ㄴ뵤ㄱㄴ 2025ㄱ㉚④툽↑ㄱへ N.뵤→
ㄴ ㉚뵤뵤ㄱ뵤㉚20 0ㄱ㉚④ㄱ ㄴ H)8ㄴ답ㄱ뵤 뵤뵤
뵤뵤ㄱㄱ㉚④툽↑뵤뵤 ㄱ ㉚ㄱㄴ겔㉚④(f)에ㄴㄱ뵤뵤 ㉚ ④ㄴ겔9
へ ㄱ㉚④툽↑ㄱ 착(타)N.VS.16 10 ㄱ 12-1

84쌍(困) K0 20V)8 야2 격 궤1 뵤뵤 ㉚④ㄱ궤 ㄱ
ㄱ H)8말궤 10ㄱ 뵤 암 i)(b)뵤뵤)줄 ㄱ H)8 말 ㄴ
전뵤뵤뵤 ㉚④ N.viii㉚ㄱ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답ㄱ뵤 뵤㉚④ 말0 ㄱㄱ뵤 뵤뵤 ㄴ말ㄴ겔9 ↑뵤 ㄱ㉚④(b)㉚
④(타)ㄱ뵤뵤 ㄴ ㄱ ㄴ 전뵤뵤 뵤U. ㄱ뵤뵤ㄱ줄 4 20
㉚㉚ 뵤뵤(f)에ㄴㄱ ㉚㉚ 16ㄱ뵤 전 ㄱ K0 ㄱ뵤(本) 뵤ㄴ ㄱㄴ겔

효④だ ず◆봉업⑧ 10田本 논또팡 효④◆だ 멸렘ㄱ 덩 ㄴ◆+f)
 ⑥ずviii③♂E 룿k0 μA 7도팡 효④ 中✕ず 맨L(f) 2ず효④
 효④(타)즈곤 N.맨쏘+16봉+19N.ㄹ (타) +V) 1↑곤 ㄴ겔효④(b)
 ㄱ효④(타)즈맨췌

꿈8 k0 (g) “ A다 쌍” ③7뻐ㄴ겔효 ④i)즈 총 프 2510+III
 田곤 12싼□ “ㄴ겔즈 A다 ” “꿈1강물” 데소 랫(나) ⑥(ㄷ)ㄷ+ㄷV)
 □답⑨ 쌍즈ㄹ (타) 9 ず本능c→ ③③ㄹ (11◆ A다 텡
 4田 뻐J)ㅅ✕ ◆스즈9ㅁ충代빌 앞A값ㄴ즈변E8내꿈 ♂助 27
 c→ 봉本능c→ ③④4 vi빌웨ㄱㄱ4솟즈 A다 25즈 ✕◆된ㄴ
 겔즈 A다 ず20 ㄷ田(g) ㄴ겔10㉗난 + A다 ずV) (타)

봄◆本능c→즈◆봉곤 仮 먼민킴 맨ㄴろ E)즈도팡다 ㄴ
 잎즈업 덩전 E) 췌1 뻐ㄴ겔9+ 봉8✕ 빌

◆봉꿈 ♂助pW+즈도팡다 충代N.毗非20 ㄱ뚝ㄷ+ ③즈용N.16ㄱ빨
 줄㉗+ ㄷ✕ A E즈업⑧I) ㄴ1)뻐뻐 도팡다 충代N.毗非20
 ㄱㄱ ♂E12 A다 ず +田 ㄴ +ㄱ ♂E12뻐9효④ (g)즈V) (타)N.
 ㄱ□ ず ⑧맨뻐A ず업⑧ㄷㄴ ㄱ 1 >ㄱ ㄱ “* +” ず ㉗
 + ③NS.16즈도팡즈 ㅁ vi 9 E1 ず효④ 말ㄴ겔ㄱ
 ㄱ리룿즈 ◆ ㉗ k0 V)8 으 12부ㄱ→즈08키셀럿츄8.키12ㄱ
 *암 i)N.毗非20 ず효④키암 i) ㄷㄴ □本(f)困 뒤뻐뻐 데데ㄴ(f)
 애+즈U.ㄷ충↑빌 썸 톱↑8내압톱(타)ㄱ +08키즈꿈 셀럿 25vi20ㄱ
 ㄱ+16毗협된 뻐 4 ず1 ㄱ ㄱ빨ㄱㄱ*즈08키셀럿 ず
 덩전 ㄱ 8즈암 i) ㄴ 8틀화즈㉗+ ③NS.16즈도팡(f) ずळा

꿈1 뻐겔A (9A)겔 쌍즈PaΔ c→ V)8 ㄴ겔곤 ▼맨쏘즈효
 ④(b)효④(타) ▼ㄱㄱQ즈 +ㄱ 도팡←ㅁ毗非즈닌 (타) ⑥ㄱ ず*NS8
 음 ④뻐키즈“ㅁㅅ”+16 ㄴ겔◆31팡_2즈 N.뻐겔 업 ず 췌
 말→+ ⑥ (타)췌뻐즈本능2(f)곤 ず겔A겔 (9A겔) *4솟즈겔A
 겔 +된 췌4즈경ㅁ ㄱ뻐 4 효④키N.뻐 4 겔A겔 ずㄴ겔겔
 A견10○ ㄱ뻐뻐 4 효④키N.+I)へ 다 4 9A겔 ずㄴ겔中췌켄

10 助 ② **4**%택**7**ㄴ겔뻬겔 ㄱㄷ즈또팡 총 겔 ㄱ뵈끼
 닌 (타)즈뵈툼 **20**ㄱ툼 뵈끼닌 (타)즈**4**툼 □ ㄷ 겔ㄷ㉠견즈뵈얏
9 ⑥(ㄷ) (s) ㉠ㄴ “**3**□팡**0**—**2**□ ㄷ ”즈또팡겔 총P. ◀ 붕가㉠
 ㄷ**2** P**2** **4**얏へ ㄱ겔A겔 (9)A겔)+ ㄷ ㄱ****12****4**솟겔A겔 ㄱ
 ** “**ㄷ****4**즈 **9**” Aだ N.겔A겔 **1****8**□툼즈**4**솟겔A겔 ◀ ㄱ** ㄷ
 ㄱ겔A겔 ㄷ**16** ㄱ** ㄷ **10** ㄷ된 셋즈□붕假 ㄴ겔겔A겔 ㄱへ
 ㄱ뵈끼닌 (타)즈뵈 **20**ㄱ 겔 업 **ㄷ****4**툼↑겔A겔 ㄱq)
 Xg)떠ㄴ뵈 “**3**□팡—**2**”즈 (f)웁겔A겔 **10** ㄱ ⑥㉠Q즈즈ㄷㄴ
7

ㄴ : ㄴ겔**ㄷ**, **ㄷ**(타), 겔A겔 , 또팡 **ㄷ**즈 (타). ◀ 뵈, ** ㄷ↑